

12·3 계엄, 내란 규정…위로부터의 내란은 전두환보다 위험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의미

친위 쿠데타에 해당…위험성 중대
민주·법치주의 신념 뿐리째 흔들어
자칫 어두운 과거로 회귀했을 수도
국민의 용기로 내란 조기종료된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적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공식화됐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번 내란이 친위 쿠데타 성격의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만큼,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준의 내란 사건보다 위험성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뜻밖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보고 형법 제87조를 위반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현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고고령을 발행했으며, 군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점 등이 모두 내란 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현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현법기관의 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재판부는 12·3 내란의 성격이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리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뿐리째 흔들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사적으로도 친위 쿠데타 이후 수많은 권력자들이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재산 등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

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존 내란과 비교 불가’=재판부는 12·3 내란이 기존의 전두환씨 등이 획책한 12·12 군사정변, 5·17 내란 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험하며, 이 때문에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을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국제 무역과 정치 등에 있어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다.

◇尹 ‘계동령’, 어불성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계동령’ 취지의 주장,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내란 행위 자체가 몇 시간 만에 종료돼 사망이 경미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12·3 내란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내란 행위가 조기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며, 결코 12·3 내란 기습자에 의한 게 아닌 만큼 형을 정하는데 있어 깊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동령,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사과, 진정성 없어=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그동안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해 오다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폐기했으며, 현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서 12·3 내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증거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탄로나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민들 환영 속 “권력자의 민주주의 유린, 더 엄벌했어야”

한덕수 중형 선고…지역민 반응

내란 세력 주장 궤변임을 보여줘
재발 막으려면 법적 관용 없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에 가담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5·18 관계자들과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따랐다.

특히 한 전 총리에 이어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에 동조한 군·경 수뇌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 나이가 내란 행위를 지지하고 비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1980년 악몽을 불러일으킨 내란을 주도한 주축으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에 대한 처벌이

라기에는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며 “아직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완수되지 않았다. 다시는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는 판결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아어마니집 관장도 “법원이 내란을 공식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민주주의의 역사적 무게를 고려하면 오히려 형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유장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내란 선동세력들이 주장해 온 ‘계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부디 내란사범, 동조자, 조력자들에게는 정권이 바뀌고 사회관습이 변해도 어떠한 사유로든 형을 사면하지 못

하게 못 하도록 해 법집행 기간동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앞으로 내란 수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더욱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고, 사면 등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관용이 없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도 판결 결과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원(25)씨는 “12·3 사태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인정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구형보다 형량이 8년이나 더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방어될 문제가 아니라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내란을 일으킨 책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양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 헬기·소방차 동원 진화 작업

광양지역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21일 광양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화재 발생 30여분만에 뒷 산으로 옮겨 불으며 번졌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21대와 소방차 54대 100명의 인력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진화율은 56%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기해 대웅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이날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바람은 풍속 초속 4.3m로 불고 있다.

불이 처음으로 시작된 주택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건물 전체를 태우고 불길이 잡혔으며 당시 주택 내부엔 사람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는 대로 피해현황 및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외국인노동자 잇단 추락사고 영광·나주시 2명 부상 치료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따라 2명이 크게 작은 부상을 입었다.

2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영광군 불갑면 생곡리의 한 돈사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A씨가 1.5여m 높이의 작업용 받침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몸 등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나주시 동강면의 한 비료공장에서 몽골 국적 40대 여성 B씨가 4m 높이의 리프트 기계 위에서 추락했다.

B씨는 왼쪽 발목과 어깨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준)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한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둑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버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둑 지 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립아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립점 062)511-2901~3

지역 대표 금융 기관 | 서광주농협